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평균 20% 이상 고용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고용창출 효과 조사결과, 업체당 평균 고용 증가율은 지원 당해연도인 2010년 20.3%에 달했으며 다음해인 올해에도 평균 9.0%의 추가고용을 계획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2010년 정책자금 지원기업(6,521개사)중 지원 전후 3개년('09년~'11년)의 고용실적 및 고용계획을 모두 응답한 3,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0년 지원업체 평균 고용증가율 20.3%는 작년 '09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지원 당해연도 고용증가율이 8.9%p 증가한 것으로, 그간 기술사업성 위주 정책자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창업·기술개발기업 중심의 자금배분 등으로 정책자금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

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기업은 약 35,000개의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8,619억원의 소득과 67억원의 세수증가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도 정책자금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자금 종류별·지원 유형별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업체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3년미만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며, 기업규모면에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지원 당해연도에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라 제조업의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하였으며, 향후 고용계획은 지식서비스 등 비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분야별로는 녹색·신성장,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이 유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정책자금

편성 및 운용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녹색·신성장,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매년 정책자금 고용창출 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자금을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업초기기업 및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계획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부당해고 다툼, 화해 해결 사례 크게 늘어”

- 10건 중 3건 법적 다툼 없이 화해로 종결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의 화해건수가 '10년 4월말 현재 828건에서 '11년 4월말 현재 1,130건으로 36.5%나 증가하였고, 화해 비율도 '10년 4월말 현재 23.9%에서 '11년 4월말 현재 28.8%로 4.9%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건수 및 화해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쟁당사자의 신속한 분쟁해결 의지도 있지만 절차 간소화(단독심판 적극 활용, 현지 방문 화해회의 도입 등), 위원 및 일선 조사관의 적

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해란, 국가기관의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분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선호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의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는 노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화해 노력으로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인증제 시행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대상... 자체 생산 전력은 판매 가능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정·공포

해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 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지역난방공사 및 공공기관 등의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등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 15%초과 20% 이하이면 2등급, 10% 초과 15% 이하이면 3등급, 5% 초과 10% 이하이면 4등급, 3% 초과 5% 이하이면 5등급 인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과 고시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폐기열 에너지 전환장치 개발

열적 폐기 흐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 생산

미국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가 해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열을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데일리가 보도했다.

연구팀을 주도한 Scott Hunter는 “고효율의 폐

기열 에너지 전환 장치는 전자기기 장치, 태양 전지, 컴퓨터 및 다량의 폐기열을 생산시키는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냉각시키고 전기를 생산한다”고 전했다. 이 장치로 유도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Hunter의 기술은 크기 약 1mm 가량의 캔틸레버 구조를 이용한다. 약 1,000개의 에너지 전환 장치가 컴퓨터 칩, 태양 전지 및 열을 생성시키는 다른 장치 등과 같은 장치의 1 제곱인치 표면에 부착된다. 비록 각 장치가 생성시킬 수 있는 전기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캔틸레버 구조의 무수한 배열은 원격 센서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열 생성 장치의 적극적인 냉각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전기를 생성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초전기 물질의 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초전기의 기초적인 개념은 수 세기 동안 잘 알려진 것이다. 전기를 생성시키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하는 최초의 시도는 수십년 전 시작됐지만 열을 약 1~5% 전기 전환 효율의 전기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초전기 물질 전체에 걸친 온도의 신속한 교환 속도는 에너지 전환 효율성 및 높은 전기 생산의 핵심이라고 Hunter는 밝혔다. 덧붙여 에너지 획득 기술은 단 몇 도에서 수백 도에 이르는 온도 구배를 지니는 열적 폐기 흐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Hunter는 덧붙였다.

이 장치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가열과 냉각이 대체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초전형 커패시터 구조인 MEMS의 특성을 지닌 에너지 수확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